

언 어 논 리 영 역

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평등이라는 개념은 그리 새로운 생각은 아니다. 한 국가나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이 도덕적으로 동등한 존재로 간주되어야 하고 어느 한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더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평등의 핵심이다.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평등은 종종 혼용되는 개념이지만 이들은 사실 논리적인 함축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다. 사회적 평등은 자연권의 개념과 밀접히 관련된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동등한 존재로 간주되어야 할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양의 경제적 재화를 가져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인간의 도덕적 가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화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한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사회적 평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예컨대 부자는 빈자를 돈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열등한 존재라고 인식할 수 있으며, 빈자 또한 패배주의적 의식으로 인해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평등이 실현되더라도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한 사회에서 서로 다른 인종 간에 대략적인 수준에서 경제적 평등이 실현되어 있더라도 특정 인종에 속하는 사람이 여전히 열등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서로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실제로는 내가 열등한 존재가 아님에도 타인이 나를 또는 내가 나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것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 ① 사회적 평등은 최근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다.
- ② 도덕적으로 동등한 존재인 사람들은 항상 동일한 양의 경제적 재화를 가져야 한다.
- ③ 경제적 평등이 실현된 상태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
- ④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이다.
- ⑤ 사회 구성원 간 상대적 열등감의 해소가 사회적 평등의 실현에 중요하다.

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콜럼버스는 유럽이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유럽 군주 중 한 명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스페인이 아메리카에 식민지를 건설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을 보았고, 곧이어 유럽의 대항해시대가 열렸다. 유럽의 대포, 전기 조명, 인쇄술, 소형 화기 등 무수히 많은 혁신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한결같이 유럽 일부 지역에서 무시당하거나 반대에 부딪혔지만, 한 지역에서 채택하면 곧이어 유럽 전역에 전해졌다.

분열된 유럽에서 비롯된 이런 결과는 중국의 통일이 빚어낸 결과와 뚜렷이 대비된다. 통일된 중국 조정은 먼바다로 향해하는 것을 금지한 것 외에 때때로 다른 중요한 행위의 중단을 명령하기도 했다. 예컨대 14세기에 중국은 수력을 이용한 방적기를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함으로써 산업혁명의 문턱에서 물러섰고, 한때 시계 제작에서 세계를 선도했음에도 느닷없이 기계식 시계를 실질적으로 없애버리기도 했다. 그리하여 15세기 말 이후에는 중국의 기계 장치 및 전반적인 과학기술이 이전에 비해 퇴조하게 되었다. 통일 국가의 이런 독단적 결정이 문화대혁명으로 얼룩졌던 1960~70년대 중국에서 다시 나타났다. 그때 소수의 지도자, 아니 한 명의 지도자가 내린 결정에 전국의 모든 학교가 5년 동안이나 문을 닫아야 했다.

중국은 통일 국가이던 때가 많았고, 유럽은 언제나 분열된 상태였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오래전부터 지속된 경향이다. 중국이 유럽에 대해 갖고 있던 정치적·과학기술적 우위를 상실한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중국의 만성적인 통일 지향성과 유럽의 만성적인 분열 지향성을 이해해야 한다.

- ① 분열된 사회와 통일된 사회 간 차이점이 불러온 역사적 현상
- ② 유럽 사회에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이 발생하게 된 배경
- ③ 중국 사회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극복 과정
- ④ 서구 열강이 행한 아메리카 대륙 침략의 부당성
- ⑤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게 된 원인

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개인은 자신의 사적 공간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유가 무분별하게 행사될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약을 생각해 보라. 마약은 담배나 술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이지만, 자유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국가에서도 유독 마약의 소지나 사용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마약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마약은 그 사용자와 주변 사람에게 상당한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먼저 마약 사용자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 사람의 건강이 나빠질 것이고 중국에는 마약에 중독되어 정상적인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는 분명 그 개인에게 일어나는 해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도 나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가장이 마약에 중독되었다고 해보자. 그 사람은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가정에 경제적 파탄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이는 가족구성원의 삶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것이다. 게다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더 많은 마약을 구하기 위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마약으로 인한 해악이 사회에 팽배하게 되면 사회적 불안정이 나타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총체적 후생의 감소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개인의 삶에 적극 개입하여 법적인 제재를 통해 마약을 통제해야 한다.

- ①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마약의 사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③ 마약이 가져오는 해악이 담배나 술이 가져오는 해악보다 경미하다.
- ④ 국가는 시민의 총체적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⑤ 국가는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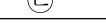
4.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디지털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사용한 민주주의’로 정의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다양한 실천, 구조, 기관의 맥락에서 정의되어야 하는 것처럼 디지털 민주주의 역시 단순히 정의하기 쉽지 않다.

새로운 통신기술은 더 진보한 직접 민주주의를 도래할 수 있게 할 시민의 기술 소유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정치적 인터넷에 관한 초기 연구는 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인터넷 민주주의는 정치에서 맞닥뜨린 에 대한 구원투수로 등장하였다. 긍정론자들은 전통적인 채널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가능성이 적은 청중이 디지털 도구로 인해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고, 나아가 제한된 대표자들만이 정치에 참여하였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수행된 실증 분석은 대체로 이런 긍정적 평가에 회의적이었다. 소위 ‘사이버 비관론자’ 집단은 온라인 정치 관행이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정치적 접근성에 관한 불평등도 해소하지 못한 채, 단지 인터넷 사용자-활동가들이 정치 게임에 기여하고 있다고 여기게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터넷상의 정치 참여가 전통적인 정치 참여와 동일한 변수에 의해 결정 혹은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의 사용이 새로운 사회 집단을 동원할 수 있게 한다는 동원 이론가들과 달리 비관론자들은

㉠을/를 강조한다.

최근의 문헌들은 이러한 유토피아적-비관적 이분법을 넘어서는다. 오늘날 모바일과 소셜미디어의 보편화는 기술을 변수로 놓는 기존의 디지털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져준다. 디지털 민주주의의 초점은 이라는 거대한 목표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세분화된 문제의식으로 바뀌고 있다. 일례로 시민참여를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 프로젝트로서의 시빅 테크(civic tech)는 영리활동과 시민참여 사이에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탐색,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그리고 데이터 공유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 | <u>㉠</u> | <u>㉡</u> | <u>㉢</u> |
|--------------------------------------|----------|----------|
| ① 대표성의 위기 - 참여의 초기 격차 -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 | |
| ② 대표성의 위기 - 기술의 불확실성 - 디지털 혁신기술의 적용 | | |
| ③ 대표성의 위기 - 참여의 초기 격차 - 디지털 혁신기술의 적용 | | |
| ④ 책임성의 위기 - 기술의 불확실성 - 디지털 혁신기술의 적용 | | |
| ⑤ 책임성의 위기 - 참여의 초기 격차 -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 | |

5. 다음 글의 ㉠~㉣을 문맥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의 60대는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하는 이중 부양 세대이다. 그들은 부모 의료비와 자녀 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자신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제도의 미성숙으로 노후 소득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국민연금 이외에 마땅한 노후 소득이 없고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완의 기회가 부족했던 이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자산은 주택으로, 최근 주택연금이 추가적인 노후 소득 마련의 대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생애평균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저소득계층의 가입자가 대부분으로,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전체 월 평균 지급금은 약 47만 원인데, 국민연금의 연금 월액과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을 합산하면 약 102만 원으로 평균 소득대체율이 약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애평균소득 월액이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계층의 경우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소득대체율은 약 71.8%에 해당하여 적정 소득대체율 수준인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연금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득 보장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국민연금의 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사적연금을 준비하지 않아 노후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이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 계층이지만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연금은 추가 노후 소득 마련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주택연금의 소득 보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연금의 가입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노후 빈곤 완화 측면에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1억 5천만 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① ㉠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제도의 성숙”으로 수정한다.
- ② ㉡을 “자녀에게 자가 주택을 증여하기 위해”로 수정한다.
- ③ ㉢을 “소득 보장 효과도 이에 비례해서 나타났다”로 수정한다.
- ④ ㉣을 “저소득계층에 해당하여 자가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자”로 수정한다.
- ⑤ ㉤을 “주택연금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로 수정한다.

6. 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적극적 안락사는 불치병 말기 환자나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존엄하게 죽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할 때, 그 죽음을 돕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 허용 여부에 대해 A와 B의 주장이 대립한다.

A: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요청하는 이유는 인간다움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죽음은 삶의 과정이며, 마지막 선택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불치병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생명의 신성함으로 견뎌내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더 나아가 안락사와 관련한 논쟁은 삶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안락사를 허용하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인간의 삶에 대한 애착은 본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죽음에 대한 담론이 확장되는 것은 죽음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한다.

B: 인간에게는 자율적으로 죽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늙고 병들어감에 따라 겪게 되는 고통을 인위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순리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의 신성함을 존중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환자들의 무력감이 미래에도 지속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앞으로의 의학적 발전을 고려할 때 안락사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자살 방조와 다름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만성질환자 및 말기 암 환자들의 자살 시도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높으므로 안락사가 허용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안락사 허용이 죽음을 조장하고 자살을 용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 보 기 > —————

ㄱ. 자살과 관련된 권리가 주어진다면 자살 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A의 주장을 강화하고 B의 주장을 약화한다.

ㄴ. A는 불치병 환자뿐만 아니라 ‘실존적 고뇌’를 겪는 이들에게 안락사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ㄷ. 인간이 지니는 권리만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면, B의 주장이 강화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7.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甲국 의회의 임시회가 개최되자, 5개 상임위원회인 A위원회, B위원회, C위원회, D위원회, E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각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단, 하루에 한 번의 회의만 진행된다.
 ○ A위원회는 E위원회보다 이틀 빨리 회의를 진행한다.
 ○ E위원회는 D위원회 회의의 바로 전날이나 바로 다음 날에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 A위원회가 수요일에 회의를 진행한다면, D위원회는 화요일에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B위원회가 수요일에 회의를 진행한다면, D위원회는 월요일에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C위원회가 목요일에 회의를 진행한다면, A위원회는 수요일에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D위원회가 화요일에 회의를 진행한다면, B위원회는 목요일에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E위원회가 수요일에 회의를 진행한다면, C위원회는 화요일에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8. 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기후변화가 환경문제의 경계를 넘어 사회·경제적으로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기후변화 위험 인식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A: 개인이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위험에 대한 개인적 행동을 넘어 위험 관련 정책을 지지하는 사회적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위험 인식은 개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기후변화 위험 인식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B: 한국인 대부분은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인지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으며,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위험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처럼 높은 기후변화 위험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인이 기후변화 위험에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국인의 높은 위험 인식 수준은 기후변화 대응 행동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 < 보 기 > —————
 ㄱ. 개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개인의 위험 인식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요인이라는 사실은 A의 주장을 약화한다.
 ㄴ. 한국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인식 수준이 높음에도 친환경 제품의 비용이 높아 친환경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B의 주장을 약화한다.
 ㄷ. 한국인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인식 수준은 높지만 친환경 소비나 온실가스 저감 실천과 같은 행동 변화에는 소극적이라는 사실은 B의 주장을 강화한다.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9.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편광(polarization)은 빛의 진동 방향이 일정하거나 회전할 때를 일컫는 현상이다. 빛은 각각의 광자들이 구성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중첩되어 존재한다. 빛을 구성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은 빛의 진행 방향을 따라 각각 수직인 평면 위에서 진동하는데, 편광은 전기장의 진동 방향에 대한 특성이다. 전기장이 일정하게 진동하면 선형 편광, 회전하면 원형 편광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 중 선형 편광만 고려한다. 편광된 빛은 일정한 진동 방향을 갖는 성분이 우세한 것이며, 무편광된 빛은 진동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무분별함을 뜻한다. 편광이 많이 되었다는 것, 즉 편광도(degree of polarization)가 높다는 것은 특정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편광 특성을 알면 빛이 반사된 표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반사된 물체의 구성 성분이나 입자 크기 등이 편광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편광은 반사가 일어나는 기작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달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사 기작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빛이 토양 입자 표면에서 정반사되는 것이며, 입사면(plane of incidence)에 대하여 수직으로 진동하는 빛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입사면이란 반사 매질의 표면에서 수직으로 그은 법선과 입사광이 만드는 평면을 말한다. 또 다른 하나는 빛이 토양 내부까지 진행하여 여러 번 반사와 굴절을 겪으며 난반사되는 것이며, 이것은 입사면에 수평으로 진동한다. 편광도는 이 두 가지 반사 기작의 비율이다. 편광도가 높을수록 두 기작의 차이가 크며, 정반사가 상대적으로 더 우세하고 난반사가 덜 우세하게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표면의 성질에 따라 반사 기작의 차이가 달라지므로 편광도를 조사하면 반사가 일어난 물질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입자 크기가 클수록 입자 내부에서 빛이 흡수되는 비율이 높아져 난반사가 덜 일어나게 되고, 편광도가 높아진다.

- ① 난반사가 많을수록 편광도가 낮아진다.
- ② 편광이 전혀 없는 빛은 진동 방향이 무작위적이다.
- ③ 입자 크기가 클수록 난반사가 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④ 편광된 빛은 일정한 진동 방향을 갖는 성분이 많을수록 편광도가 높다.
- ⑤ 편광도가 높을수록 입사면에 수평한 성분으로 진동하는 빛의 비율이 우세하다.

10.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의회외교(parliamentary diplomacy)’는 ‘국회의원, 의회외교단체 등이 국내외 현안에 대한 지지확보, 협력증진 및 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외국 의회,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외교활동’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의회외교는 정부외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정부의 공식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제21대 국회 기준 의회외교 단체로는 의회외교포럼, 의원친선협회, 한·중 의회 간 정기교류체제가 있고, 국회 소관 법인으로는 1972년에 설립된 한일의원연맹, 2022년 12월 발족한 한중의원연맹 등이 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의회외교 단체와 함께 국회 소관 법인으로 상대국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공식 설립된 의원연맹이 활동 중이지만, 미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즉, 제21대 국회 기준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외교 채널은 의회외교 단체인 한미의회외교포럼 1개뿐이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의회 간 정례적 논의 채널을 구축하여 의회외교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양국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외교포럼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외교입국(外交立國)’이 절실하며, 이에 따라 의회외교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회 내 공감대를 바탕으로 출범하였다. 의회외교포럼은 전세계 주요 거점 국가와 권역별로 외교 채널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1대 국회 기준 미·중·일·러 주요 4강과 EU, 아프리카, 아세안, 서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오세아니아의 12개 포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 국회의 대미 의회외교는 전담 조직이 제도화되지 않은 채 초청·방문·국제회의 참석 등 특정 현안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2019년 한미의회외교포럼 출범으로 미 의회와의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 구축 및 대미 의회외교의 제도화·정례화가 기대되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가 도출되지 못했다. 따라서 양국 간 의회외교 채널의 공식화·정례화를 위해서는 별도 사무국의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① 의회외교는 정부외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
- ② 제21대 국회 기준 의회외교 단체로는 의회외교포럼, 의원친선협회, 한·중 의회 간 정기교류체제가 있다.
- ③ 제21대 국회 기준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외교는 한미의회외교포럼, 한미의원연맹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 ④ 의회외교포럼은 전세계 주요 거점 국가 및 권역별 외교 채널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⑤ 한미의회외교포럼은 2019년에 출범하였으며, 미 의회와의 상시적 의사소통 채널 구축을 목표로 한다.

1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9세기 중국은 내외외환의 시기였다.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핍해졌고 아편 밀무역이 성행하여 무역수지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제1·2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하자 제국주의 국가들의 노골적인 수탈이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중국인들 중에는 부득이 해외로 나가 살길을 도모한 육체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쿨리’라고 불렀다.

쿨리의 해외 이주 방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쿨리를 사고판다는 뜻에서 노예무역을 빗대어 부른 ‘쿨리무역(coolie trade)’과 빗으로 이주비를 해결한다는 뜻을 가진 ‘채무이주(credit ticket system)’이다.

쿨리무역은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모집했고, 쿨리들은 사기 혹은 폭력에 의해 이주지로 이송되었다. 그들은 노예와 거의 비슷한 생활을 했지만 쿨리무역은 형식적으로나마 노동 계약을 맺은 이주였다. 정부의 비준을 받기도 했고 노동 계약에 따른 임금 및 고용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일견 합법적인 고용 노동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주지의 정부가 지속적인 재계약을 강제하고 생활환경에 대한 규정이 전무했기 때문에 쿨리는 마치 흑인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

채무이주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담보로 이주에 필요한 돈과 초기 정착 비용을 빌리고, 취직한 이후 노동을 통해 그 채무를 변제하면 자유의 신분을 획득하는 형태였다. 형태만 보면 쿨리무역과 거의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채무이주는 이주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내용상 큰 차이를 보인다. 다만 국가 간의 비준 혹은 개인 간의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인신매매나 노예무역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성행했던 채무이주를 ‘돼지새끼무역(pig business)’이라고 부르고, 대서양 일대에서 성행하던 채무이주를 ‘외상이주(unpaid passenger emigration)’라고 불렀다. 두 이주 형태는 이주비를 갚기 위해 1년 혹은 2년 동안 자신의 노동력 및 자유를 담보로 잡힌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지만, 동남아시아로 향했던 채무이주자의 생활환경이 대서양 연안으로 향했던 채무이주자의 생활환경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 동남아시아에는 대서양 연안보다 같은 중국인들이 더 많이 거주했기 때문이다.

- ① 쿨리는 해외로 이주한 중국인 육체노동자를 지칭한다.
- ② 돼지새끼무역은 쿨리무역과 내용상 큰 차이를 보인다.
- ③ 돼지새끼무역으로 이주한 쿨리들의 생활환경이 외상이주로 이주한 쿨리들보다 좋았다.
- ④ 쿨리무역은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쿨리들의 처우는 노예무역과 다를 바 없었다.
- ⑤ 쿨리무역과 외상이주는 모두 형식상 합법적인 노동 계약을 맺었다.

12.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한국 건축의 주체는 목조 가구식(架構式) 건축으로, 이는 한국·중국·일본의 공통 성격이다. 그러나 세 국가는 기후와 풍토 등 많은 요소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 건축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부터 다르게 출발한다. 중국의 건축은 광대한 대륙에 기반을 두어 장대하고 웅장한 맛을 주고, 일본의 건축은 섬나라 환경을 토대로 기계적이고 날카로운 맛을 준다. 반면 한국의 건축은 반도국으로 중용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소박한 맛을 기본으로 한다.

한국 건축의 특성은 건물마다 ㉠ 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마당과 마당이 서로 고저가 다른 단을 형성하며, 여기에 다시 주와 종의 관계로 기단이 고저 차이를 이룬다. 통도사처럼 거의 평지에 건축된 사찰일지라도 바닥의 ㉠ 나/이나 건축 기단 자체로 건물의 ㉠ 을/를 느낄 수 있다.

한국 건축의 또 다른 특성은 ㉡ 성이다. 이는 공간이 형성하는 중심축과 관계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좌우 대칭되게 건물이 배치된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예로 불국사도 대웅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석탑을 배치해 언뜻 좌우 대칭으로 볼 수 있으나 전체적인 배치를 생각하면 ㉡ 이다.

한편 해외의 명승지 건축물과 한국 건축을 비교하면, 한국은 지붕면이 정면이 되고 박공*면이 측면이 되어 대형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진입 방향에서 공간의 깊이를 느끼지 못하는 반면, 서양 건축에서는 박공면이 정면이 되어 신전이나 서당에 들어갈 때 상당한 공간의 깊이가 느껴진다. 그러므로 한국 건축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건물과 건물 사이 그리고 마당이 구성하는 외부 공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물론 한국 건축의 여러 특성은 한국의 건축 재료에서도 기인한다. 예를 들어 한국 건축의 주요 부재는 육송(陸松)인데, 육송은 건축 재료로 볼 때 결코 좋은 수종은 아니다. 장대한 부재를 얻기 어려운 것은 물론 똑바로 자라는 경우보다 구부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진이 많아 치목(治木)이 어렵고 치목한 후에도 나무가 잘 터지고 비틀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육송이 한국 건축의 주력이 된 것은 육송 이외의 재료 공급이 ㉢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수들은 육송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창의적 노력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여러 형태의 구성 부재를 결합하는 한국 특유의 목조 가구식 건축 양식이 탄생하게 되었다.

* 박공: 양편에 人모양으로 붙인 두꺼운 널

- | | ㉠ | ㉡ | ㉢ |
|---|----|-----|---------|
| ① | 위계 | 대칭 | 수월하기 |
| ② | 수평 | 비대칭 | 수월하지 않기 |
| ③ | 수평 | 대칭 | 수월하지 않기 |
| ④ | 위계 | 비대칭 | 수월하지 않기 |
| ⑤ | 위계 | 비대칭 | 수월하기 |

13. 다음 글에서 제시된 (가), (나), (다), (라)의 논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 (가) 흡연자들에게 지금 담배를 끊지 않을 경우에 잃게 될 수년간의 세월을 경고한 편지가 담배를 끊을 경우 얻게 될 효과를 언급한 편지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 (나) 성적이 높아지는 상황과 낮아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성적이 높아지는 경우보다 낮아지는 경우에 더 강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 (다) 소비자에게 어느 상품의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아 품절될 것이라고 말하는 “얼마 없습니다!” 전략이 자주 활용된다.
- (라) 이성 친구가 생기는 상황과 헤어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했을 때 대학생들은 헤어지는 쪽에 더 강한 감정을 토로하였다.

- ①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무언가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 ② 사람들은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 ③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들을 자신이 결정한 입장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맞춰 나가게 된다.
- ④ “이번과 같은 기회는 매우 드물다.”는 인식은 그 기회 자체를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들 수 있다.
- ⑤ 상실에 대한 심리적인 두려움이 획득으로 얻는 만족감보다 크다.

1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미국 상원은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을 비준하였다. 그러나 1997년 미국 상원은 동 협약의 이행 조약인 교토의정서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감축의무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미국 경제에 해가 되는 어떤 기후 협정에도 미국 정부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이를 상원에 회부하지 않았고,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교토의정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교토의정서는 미국의 참여 없이 이행되었다.

2015년 교토의정서 후속 협정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체결된 후, 파리협정이 상원의 비준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는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인지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상원의 비준이 필요한 조약(treaty)이 아닌 행정협정으로 보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함께 2016년 파리협정 수락 문서에 서명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였고 2020년 11월 4일 미국은 파리협정을 공식적으로 탈퇴하였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21년 1월 20일 파리협정 재가입을 선언하였고 미국은 2021년 2월 19일에 공식적으로 파리 협정에 재가입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제환경협정에서 미국을 우선 한다.”는 제목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하면서 파리협정의 재탈퇴를 선언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재탈퇴 결정은 강렬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7년의 탈퇴가 3년이 걸린 것에 비해 2025년의 재탈퇴는 1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파리협정 당사국들의 2035년 감축목표(NDC 3.0) 제출기한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미국의 탈퇴 결정은 다른 국가들의 반발과 탈퇴까지 유발할 수 있어, 향후 파리협정 내의 EU와 중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2025년 행정명령은 파리협정의 상위협정인 UNFCCC 탈퇴를 명시하지는 않아, 미국이 UNFCCC 당사국으로서의 활동은 할 것으로 보인다.

- ①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탈퇴 결정에 의한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는 3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 ② 1998년 클린턴 대통령은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이를 상원에 회부하지 않았다.
- ③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파리협정 재가입을 선언하였고, 같은 해 2월 19일에 공식적으로 재가입이 이루어졌다.
- ④ 미국 상원은 1992년 UNFCCC를 비준하였다.
- 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재탈퇴 결정은 UNFCCC 탈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미국은 UNFCCC 당사국으로서의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15. 다음 글의 문단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환경은 생태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생태적 요소는 동물, 식물 등의 생물 요소와 공기, 물, 햇빛 등 비생물 요소를 포함하며, 이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사회적 요소는 건물, 도로, 철도, 댐 등과 같이 형태가 있는 것과 문화, 언어, 법규, 종교, 사회 제도 등과 같이 형태가 없는 것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가) 근대 이전까지 인류는 자연으로부터 필요한 물자만을 이용하여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요소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는 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환경 용량을 넘어서는 범위까지 생태적 요소를 이용하여 환경을 크게 훼손하였다.

(나) 최근에는 도시에 숲을 가꾸거나 생태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건물을 짓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환경 용량을 넘어서는 개발을 막기 위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 등의 사회적 요소들을 도입하기도 한다.

(다) 이처럼 산업화 과정에서 생태적 요소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지나친 개발로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자, 인간은 생태적 요소와 조화를 이루는 삶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사회적 요소를 생태적 요소와 서로 잘 어우러지도록 개발하면 인간은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자연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생태적 요소를 이용하여 사회적 요소를 조성함으로써 발달해 왔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요소는 생태적 요소를 통제하거나 변형하고, 생태적 요소는 사회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며 상호 작용을 해 왔다.

- ① (가)-(나)-(다)-(라)
- ② (가)-(라)-(나)-(다)
- ③ (라)-(가)-(나)-(다)
- ④ (라)-(가)-(다)-(나)
- ⑤ (라)-(다)-(가)-(나)

16.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귀류법이란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한 후 그 명제로부터 모순을 이끌어내어 그 명제가 참일 수 없음을, 즉 그 명제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유클리드(Euclid)는 소수(素數)의 개수가 무한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귀류법으로 간단히 증명하였다.

소수의 개수가 유한하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모든 소수로 이루어진 유한집합 A 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집합 A 는 크기 순서대로 $2, 3, 5, 7, \dots, P_n$ 까지 n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가지게 된다. 즉 P_n 은 모든 소수 중 가장 큰 소수이다. 이때 해당 원소들을 모두 곱한 다음 1을 더한 수를 x 라고 할 경우($x=2 \times 3 \times 5 \times \dots \times P_n + 1$) x 는 집합 A 의 어떤 원소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즉 ㉠. 그러나 이는 P_n 이 가장 큰 소수라고 한 것에 모순된다. 즉 처음의 가정으로부터 모순이 얻어진다. 따라서 소수의 개수는 무한하다.

- ① x 는 소수가 아니다
- ② x 는 집합 A 에 속하지 않는 더 큰 소수이다
- ③ 집합 A 는 n 개보다 적은 원소를 가지게 된다
- ④ 집합 A 는 소수를 원소로 가질 수 없게 된다
- ⑤ x 는 어떤 수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1이 된다

17.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 전체회의를 개최하려는 위원회는 5개뿐이며, 이 중 최소 1개의 위원회는 반드시 개최한다.

○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하면 환경노동위원회도 개최한다.

○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하면 환경노동위원회도 개최한다.

○ 국토교통위원회가 개최하지 않으면 환경노동위원회도 개최하지 않는다.

○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하지 않으면 국토교통위원회도 개최하지 않는다.

○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하면, 기획재정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 행정안전위원회는 개최한다.

————— < 보 기 > —————

ㄱ. 기획재정위원회는 개최한다.

ㄴ.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다.

ㄷ. 최대 3개의 위원회가 개최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8. 다음 글의 ㉠과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동일한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과학적 관점들이 대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언어의 발생과 학습에 대해서도 크게 ㉠기호주의와 ㉡발생주의의 두 가지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

기호주의 관점은 모든 인간이 보편적인 언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본다. 기호주의 패러다임을 이끈 언어학자로는 촘스키가 유명한데, 그는 인간이 일반적인 학습 능력을 통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내재된 언어 능력, 즉 보편 문법에 기대어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든 언어에는 제한된 수의 보편 규칙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불규칙적인 형태와 관용 표현, 그리고 한 단어와 특정 단어들이 함께 나타나는 언어 관계 등이 대표적인 예다. 만약 한국어가 모어인 사람이라면 ‘눈이’ 다음에 올 수 있는 단어로는 ‘내리다’, ‘부시다’ 등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언어 관계가 영어나 다른 언어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호주의와 반대로 발생주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보편적인 언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언어라도 학습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학습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가정한다.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일반적인 학습 능력은 두뇌의 감각 처리 및 신경망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렇게 신경망이라는 연산 모델에 기대어 인간의 인지 현상을 이해하려는 접근 방식을 연결주의라 한다. 연결주의는 언어뿐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학습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는 악보의 음표를 따라 건반을 누르는 일이 익숙하지 않지만 경험이 많아지면서 그 과정은 자동화되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눈이’ 다음에 ‘부시다’가 오는 언어 관계나 관용 표현들이 왜 발생하는지가 쉽게 설명된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눈이 부시다’와 같은 말을 들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입력들을 통해 ‘눈이’ 다음에 ‘부시다’가 오는 신경망 연결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 < 보 기 > —————

ㄱ. 어린 아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올바른 문장을 발화할 수 있다는 점은 ㉠을 강화한다.

ㄴ. 한국어에서는 ‘모자를 쓰다’로 표현하나 영어에서는 ‘wear a hat(모자를 입다)’로 표현한다는 사례는 ㉡을 강화한다.

ㄷ. 명사, 동사, 형용사와 같은 기본적인 문법 범주들이 인간의 언어 능력에 내재되어 있다는 주장은 ㉠과 ㉡ 모두를 강화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조선의 민화는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사회적, 문화적 현상과 서민들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민족 회화이다. 조선 민화는 일반 회화와는 달리 외국의 화풍이나 미의식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 대신 조선 민중들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그들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과 감정을 잘 담아내었다. 이를 통해 서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문화적인 소통과 이해가 이루어졌다.

민화의 소재는 상징성을 통해 사회적인 가치나 개인의 열망, 희망 등을 표현하며, 이는 민화 작품의 이해와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민화는 상징성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며 그 소재들은 문화와 역사, 사상 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

봉황(鳳凰)은 고대 중국에서 신성시했던 상상의 새로 기린, 거북, 용과 함께 사령(四靈)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봉황은 항상 잘 다스려지는 나라에 나타난다고 하여 태평성대(太平聖代) 또는 군자(君子)를 의미하며, 민화에서는 한 쌍으로 그려지기도 하는데 이는 부부 금슬, 천생연분을 의미한다. 또한 민간에서는 봉황을 ‘봉불탁숙(鳳不啄粟)’이라 하여 굳은 절개와 청렴을 상징하는 소재로 활용하였고, 봉황과 태양을 함께 그린 ‘조양군봉도(朝陽群鳳圖)’는 임신양명의 기원을 담고 있는 길상적인 그림이다.

민화의 다른 상징적인 소재로는 용(龍)이 있다. 용은 복을 가져다주는 시복신(施福神)으로서 서수(瑞獸)*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 용은 길상의 상징으로 숭배되었고, 사람들은 용꿈을 좋아하여 그러한 꿈을 몰래 간직하기 위해 용꿈 그림(몽룡도, 夢龍圖)까지 그렸다.

모란(牡丹)은 부귀영화를 상징한다. 19세기 조선 사회의 구조 변동 속에서 가장 힘을 잃어가는 것은 관념적인 유교의 도덕 가치관이었고, 가장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은 경제 활동을 통한 현실적인 이익 추구였다. 이에 따라 활발해진 상업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게 된 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모란은 이러한 변화와 함께 부귀에 대한 열망을 상징하며, 민간에서는 모란도(牡丹圖)를 병풍으로 만들어 연회나 혼례식에 많이 사용하였다. 한편 궁중에서는 모란이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궁중 그림이나 문양의 소재로도 많이 이용되었다.

민화의 다른 소재로는 연꽃, 기린, 나비, 고양이 등이 있다. 연꽃의 씨앗인 연밥을 한자로 연자(蓮子)라고 하는데, 이는 아들을 연달아 낳는다는 의미인 연자(聯子)와 음이 같다. 또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민화 속의 연꽃은 많은 자손을 낳게 해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린은 땅 짐승을 대표하는 영수(靈獸)로 수컷을 기(麒)라 하고, 암컷을 린(麟)이라고 한다. 기린은 인자하기 때문에 봉황과 마찬가지로 기린이 나타나면 세상에 성군(聖君)이 나와 왕도를 펼치기를 바라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 기린은 이마에 뿔이 하나 둔아 있는데 그 끝에 살이 붙어 있어 다른 짐승을 해치지 않을 뿐 아니라 생물을 아껴서 풀도 밟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인수(仁獸)의 영장이라는 점에서 걸출한 인물에 비유된다. 민화에서 기린은 영웅이나 인재를 상징하며 그림에서는 대개 한 쌍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부부가 금슬 좋게 살아가면서 지혜롭고 재주가 뛰어난 자식을 낳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나비는 80세를 의미하므로 나비 그림인 호접도(蝴蝶圖)는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고양이가 나비를 바라보는 그림인 묘접도(猫蝶圖) 역시 장수하기를 바라는 의미이다. 모란은 부귀영화를 상징하므로 모란과 나비가 함께 그려진 그림은 부귀와 장수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 서수: 상서로운 짐승

19.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조선 민화에서 고양이가 나비를 바라보는 그림은 장수를 상징한다.
- ② 조선 민화는 조선 민중들의 일상과 정서를 표현하는 민족 회화이다.
- ③ 사령(四靈)은 봉황, 용, 거북, 기린을 의미한다.
- ④ 조선 민화의 소재는 한 쌍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 ⑤ 조선 민화에는 19세기 조선 사회에서 중시되던 유교의 도덕 가치관을 반영하는 소재가 많이 활용되었다.

20. 위 글에 나타난 민화의 소재와 각 소재가 민화에서 담고 있는 의미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용	- 길상, 복
㉡. 모란	- 부귀, 왕의 권위
㉢. 연꽃	- 다산, 임신양명
㉣. 봉황	- 부부 금슬, 절개와 청렴
㉤. 기린	- 영웅, 인재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상 황 판 단 영 역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법」

제○○조(대기오염도 예측·발표)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예측·발표의 기준 및 내용 등 대기오염도의 예측·발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 이하로 낮아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법 시행령」

제◇◇조(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대상) 법 제○○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오존(O₃)

- ①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시·도지사의 조업단축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업을 단축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기간을 정함이 없이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 이하로 낮아진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경보를 유지할 수 있다.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 총 1시간 미만의 휴게시간을 줄 수 있다.
- ②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구두로 합의하면 1주간 최대 2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사태가 급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휴일을 줄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⑤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로자가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원자력안전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정보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원자력안전정보

다.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원자력안전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라.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②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등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보유·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이 된다.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의 운전점수는?

- 운전점수는 100점에서 과속거리, 급가속 횟수, 급감속 횟수에 따라 차감된 점수다.
- 과속거리 등에 따른 점수 차감 방식은 다음과 같다.

과속거리	고속도로: 제한속도에서 15km/h를 초과하여 주행한 거리(1km)당 1점 감점 일반도로: 제한속도에서 10km/h를 초과하여 주행한 거리(1km)당 1.5점 감점
급가속	급가속 1회당 1점 감점
급감속	급감속 1회당 1점 감점

- 단, 급가속 및 급감속으로 인한 점수 차감은 각각 최대 5점이며,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구분하지 않는다.

— < 상 황 > —

- 甲은 제한속도가 60km/h인 일반도로를 총 30km 주행했는데, 이 중 3km를 75km/h로, 2km를 85km/h로, 25km를 55km/h로 주행하였다.
- 甲은 제한속도가 100km/h인 고속도로를 총 100km 주행했는데, 이 중 50km는 110km/h로, 5km는 120km/h로, 45km는 95km/h로 주행하였다.
- 甲은 일반도로를 주행할 때 급가속을 3번 했고, 급감속을 6번 했다. 고속도로에서는 급가속과 급감속을 하지 않았다.

- 78.5점
- 79점
- 79.5점
- 80점
- 80.5점

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한 번에 산책시킬 수 있는 강아지 수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A강아지 유치원에는 나리, 다로, 로이, 미미, 부기, 슈슈 총 여섯 마리의 강아지가 다니고 있다. 이 유치원은 <상황>과 같은 산책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강아지를 산책시킬 수 있다.

- < 상 황 >
- 나리와 부기는 자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산책시켜야 한다.
 - 미미와 슈슈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함께 산책시킬 수 없다.
 - 다로와 로이 중 적어도 한 마리는 반드시 산책시켜야 한다.
 - 로이를 산책시키려면 나리와 미미도 반드시 함께 산책시켜야 한다.

	최솟값	최댓값
①	1	4
②	1	5
③	2	4
④	2	5
⑤	2	6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모임 날짜는?

가희, 나희, 다희, 라희, 마희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 중 하루를 모임 날짜로 정하려고 하며, 아래와 같은 순서로 모임 날짜에 대하여 발언하였다. 모임 날짜는 가희, 나희, 다희, 라희, 마희가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날로 선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날이 다수가 있으면 가장 빠른 날을 모임 날짜로 한다. 단, 1월 1일은 금요일이다.

- 가희: 난 월요일이랑 금요일은 안 돼.
- 나희: 나는 주말에 이미 약속이 많아서 평일만 될 것 같아. 예외적으로 16일은 가능하긴 해.
- 다희: 다들 엄청 바쁜 것 같네. 근데 나도 3의 배수인 날에는 선약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 예컨대 3일, 6일, 9일 등을 말하는 거야.
- 라희: 난 1월의 두 번째 수요일, 두 번째 목요일, 네 번째 화요일이 어려울 것 같아.
- 마희: 너희들의 얘기를 모두 고려했을 때, 모임 날짜로 가능한 날은 이제 몇 개 남지 않았네. 난 남은 날짜 중에서 빠른 순서대로 2개의 날짜에는 회사에 일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 ① 1월 10일
- ② 1월 11일
- ③ 1월 12일
- ④ 1월 14일
- ⑤ 1월 16일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과 乙은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배치한 뒤, 배치된 각 자리 별로 숫자가 더 큰 사람이 1점씩 득점하여 득점의 합이 더 큰 사람이 이기는 놀이를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甲이 왼쪽부터 1, 2, 3, 4, 5 순으로 배치하고, 乙이 왼쪽부터 5, 4, 2, 3, 1 순으로 배치한 경우 甲은 3, 4, 5로 3점을 득점하고, 乙은 5, 4로 2점을 득점하여 甲이 이기게 된다. 단, 같은 숫자를 같은 자리에 배치한 경우 두 사람 모두 득점하지 못한다. 甲과 乙이 배치한 숫자는 다음과 같다.

	(왼쪽)			(오른쪽)		
甲	3	□	1	□	□	
乙	1	3	4	2	5	

< 보 기 >

- ㄱ. 甲은 최대 3점을 득점할 수 있다.
- ㄴ. 甲이 왼쪽에서 네 번째 자리에 2를 배치했다면 甲이 반드시 이긴다.
- ㄷ. 甲이 왼쪽에서 다섯 번째 자리에 5를 배치했다면 비길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A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솜사탕, 팝콘, 커피, 아이스크림 총 4가지 간식을 나눠주고 있다. 가영, 나영, 다영, 라영, 마영은 4가지 간식 중 각자 한 종류 이상을 받았으며, 이들의 진술은 모두 참이다.

- 가영: 나는 아이스크림을 받았어.
- 나영: 가영이나 다영이 받지 못한 간식은 나도 전부 받지 못했어.
- 다영: 가영이는 팝콘을 받았는데, 나는 팝콘을 받지 못했어.
- 라영: 나는 아이스크림을 받지 못했고, 솜사탕은 나를 포함한 3명이 받았어.
- 마영: 나는 커피를 포함한 2가지 간식만 받지 못했는데, 가영과 나영은 이 2가지 간식을 모두 받았어.

- ① 나영은 솜사탕을 받았다.
- ② 팝콘을 받은 사람은 2명 이상이다.
- ③ 가영이 받은 간식은 3종류 이상이다.
- ④ 아이스크림을 받지 못한 사람은 2명 이상이다.
- ⑤ 마영은 아이스크림을 받지 못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9. ~ 문 10.]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등으로 세분된다.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 매년 정기승급을 통해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이다. 직종별로 기본급 등 봉급표가 다르게 설정되며, 봉급 외에도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특히,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근무 성적 및 업무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포함된다.

과거 연공급을 기반으로 한 보수제도는 보상의 공정성보다는 균등성을 중시하여 개인의 능력과 실적, 공헌도 및 조직의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조직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기능이 미흡하다는 단점도 존재했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연공급 중심에서 능력(실적)주의로 전환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민간 부문의 우수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고 보수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봉제가 도입되어 호봉제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연봉제는 다시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급적연봉제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성과 측정이 어려운 특성상 개별 직위별로 고정된 연봉을 책정받는다. 이들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연봉 외에도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이 지급된다.

성과급적연봉제는 일반직, 별정직 등 1~5급(상당)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계급별 기본연봉과 업무 실적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연봉은 계급별 설정된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의 급여가 추가 지급된다.

성과연봉은 전체 인원에 대해 S등급은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의 비율로 등급을 부여하며, 각 등급별 인원은 해당 비율을 적용한 후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이때, 전체 인원과 등급별 인원의 합이 맞지 않을 경우, 반올림을 하여 올린 등급 중 더 낮은 등급의 인원을 제외한다. 예를 들어 전체 인원이 5명인 경우 S등급 1명, A등급은 1.5로 2명, B등급 2명, C등급 0.5로 1명 총 6명이 되는데, 이 경우 반올림을 하여 올린 A와 C 중 더 낮은 등급인 C등급 1명을 제외한다.

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호봉제에서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은 연차가 같다면 수당이 다를 수 있어도 기본급은 동일하게 지급된다.

ㄴ. 가족수당은 고정급적연봉제와 성과급적연봉제 모두에서 지급될 수 있다.

ㄷ. 성과연봉은 일반직, 별정직 등 1~5급(상당)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0.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성과연봉으로 10명이 B등급을 받게 되는 전체 인원의 최솟값은?

- ① 23명
- ② 24명
- ③ 25명
- ④ 26명
- ⑤ 27명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조 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방역위생관리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④ 방역위생관리업자는 소독 또는 방제를 하여야 하며,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영업정지기간 중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한 경우

- ① A시에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고 있는 甲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A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관할 세무서장이 방역위생관리업자 乙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乙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 ③ B군 군수에게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丙이 60일 동안 휴업하려면 B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C시 시장에게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丁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한 경우 C시 시장은 丁에게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⑤ 방역위생관리업자 戊가 소독을 하였을 때에는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 甲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근로자 乙이 육아휴직으로 휴업했다면,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일 계산 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③ 한 회사에서 30년을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 丙의 휴가 일수는 30일 이상이다.
- ④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丁이 사용자의 귀책으로 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휴가는 소멸된다.
- 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 戊가 청구한 시기와 달리하여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제○○조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조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제△△조 ① 제□□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2.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 유무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 ① 재산상 피해가 없고 지속적이지 않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학부모는 4명일 수 있다.
 - ③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④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 유무의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4명의 친구들이 모두 다리를 건너는데 소요되는 최소 시간은?

- 4명의 친구들이 밤에 다리를 건너려고 한다. 이들은 다리를 건너는 속도가 모두 다르며, 걸리는 시간은 각각 1분, 2분, 5분, 8분이다. 밤이라서 다리를 건널 때는 반드시 랜턴을 들고 가야 하는데, 현재 랜턴은 한 개뿐이다. 또한, 다리 폭이 좁아 한 번에 최대 2명까지만 건널 수 있고, 다리를 두 사람이 함께 건널 때 걸리는 시간은 두 사람 중 더 오래 걸리는 시간에 해당한다.
- ① 14분
 - ② 15분
 - ③ 16분
 - ④ 17분
 - ⑤ 18분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들어갈 숫자는?

甲: 乙 주무관님, 처음 만나서 반가워요. 결혼은 하셨어요?
乙: 네, 과장님. 다음주 일요일이 10주년 결혼기념일입니다.
甲: 축하드립니다. 자녀는 있으세요?
乙: 2주년 결혼기념일에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甲: 첫째요? 한 명이 아닌가 보군요?
乙: 예리하시군요. 제 아이들 나이를 모두 곱하면 100보다 큰 홀수이지만, 다 더하면 짝수가 됩니다. 제 아이들은 나이가 모두 다르구요. 제 아이들 나이를 맞춰보실래요?
甲: 혹시 주무관님 아이들 나이를 모두 더한 숫자가 ㉠ 맞나요?
乙: 오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 단, 나이는 만 나이 기준으로, 출생일에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나면 1살씩 먹는다.

- ① 10
- ② 12
- ③ 14
- ④ 16
- ⑤ 18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들어갈 숫자는?

甲, 乙, 丙, 丁 4명의 친구들은 현장학습으로 과학관에 갔다. 과학관에는 색상(적색, 녹색, 청색)이 다르게 보이도록 하는 세 가지 유형의 특수 안경이 있고, 각 유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A유형: 적색, 청색을 모두 적색으로 보이게 한다.
- B유형: 녹색, 청색을 모두 청색으로 보이게 한다.
- C유형: 적색, 녹색을 모두 녹색으로 보이게 한다.

甲, 乙, 丙, 丁은 각각 하나의 특수 안경을 쓴 채로 총 20개의 적색·녹색·청색 동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고, 이는 모두 참이다. 이들이 착용한 특수 안경에는 A~C유형이 모두 존재한다.

- 甲: 녹색 동전이 5개야.
- 乙: 청색 동전이 9개야.
- 丙: 녹색 동전이 11개야.
- 丁: 적색 동전이 ㉠개야.

- ① 0
- ② 6
- ③ 9
- ④ 11
- ⑤ 15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벌점을 받을 학생만을 모두 고르면?

중학교 영어교사 A는 시험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 네 명(甲, 乙, 丙, 丁)과 개별 면담을 가졌다. 다음은 학생들의 진술이다.

○ 甲: 乙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乙: 丁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丙: 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 丁: 乙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네 학생 가운데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학생은 한 명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A는 거짓을 말한 학생과 부정행위를 한 학생 모두에게 벌점을 주려고 한다.

- ① 甲, 乙, 丙
- ② 甲, 乙, 丁
- ③ 甲, 丙, 丁
- ④ 乙, 丙, 丁
- ⑤ 甲, 乙, 丙, 丁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 乙, 丙 세 사람은 하트·스페이드 두 가지 문양 중 하나와 붉은색·검은색·파란색 세 가지 색깔 중 하나의 조합으로 구성된 그림이 그려진 서로 다른 6장의 카드를 각각 2장씩 나눠 갖고 있다. 세 사람은 자신이 가진 카드의 문양이나 색깔에 대한 정보 중 하나만 공개할 수 있다. 세 사람이 공개한 카드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모두 참이다.

○ 甲: 내가 가진 카드에는 검은색 그림이 있어.

○ 乙: 나는 하트 문양이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어.

○ 丙: 나는 붉은색 그림이 있는 카드만 갖고 있어.

— < 보 기 > —

ㄱ. 甲은 같은 문양의 그림이 있는 카드를 갖고 있다.

ㄴ. 甲과 丙이 가진 카드 중 하트 문양이 있는 카드는 총 2장이다.

ㄷ. 乙이 가진 두 카드의 그림은 색깔이 서로 다르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골수 검사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하여 골수를 채취하는 의료행위로서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본질적·핵심적인 의료행위는 아니다. 골수 검사가 환자의 후상 장골극(PSIS: 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부위에서 수직 방향으로 골수 채취바늘을 삽입하면서 골막을 뚫어 골수강 내의 골수를 채취한 다음 골수 조직을 채취하는 행위로 침습적인 의료행위이기는 하다. 그러나 ○○학회 및 □□학회는 골수 검사에 관하여 “골수 검사가 주로 시행되는 부위인 후상 장골극은 엉덩이에서 유일하게 튀어나온 구조물로 검사 위치 판단이 쉽고, 주요한 혈관이나 신경의 분포가 없어 심각한 신경 손상·출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침습적이기는 하지만 최소 위험을 가지는 시술에 해당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후상 장골극 부위를 통한 골수 검사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합병증으로는 침습적 검사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통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출혈의 위험이나 지속되는 심각한 통증은 매우 드물며 신경손상, 사망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방식의 골수 검사는 비교적 위험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골수 검사에 대한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라면 의사가 그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 골수 검사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 골수 검사 시행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응급상황 발생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의료기관 내의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다만 환자의 체구가 작거나 성인과 같은 정도로 골화가 진행되지 않은 소아 등의 경우 골수 검사 과정에서 골수채취바늘이 과도하게 삽입되거나 뼈가 손상될 위험이 있고, 골수 검사 과정에서 움직이는 등 협조가 어려워 대부분 정맥마취 하에 검사가 시행된다. 이러한 환자에 대한 골수 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나 검사 부위의 합병증 발생 여부를 직접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가 골수 검사 현장에 입회하여 진료 보조 행위를 하는 간호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골수 검사는 혈액·종양성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본질적·핵심적인 의료행위이다.
- 학회 및 □□학회는 골수 검사가 비침습적인 시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후상 장골극 부위를 통한 골수 검사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합병증으로는 출혈의 위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골수 검사에 대한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라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골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체구가 작은 환자에 대한 골수 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직접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사가 골수 검사 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20.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2단계 감염자수(R_1)가 동일한 국가를 모두 고르면?

기초감염재생산지수(Basic reproduction number, R_0)란 집단 내 감염성이 있는 환자 한 명이 감염전과 가능기간에 감염시킬 수 있는 평균 사람 수로 정의된다. 해당 질병에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면역비율(p)이라 하면, 우리는 2단계 감염자수(R_1)를 통해 질병의 유행 행태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

$$R_1 = R_0 - pR_0$$

예를 들면, 甲국에 새로 퍼지고 있는 질병의 기초감염재생산지수(R_0)가 1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B형 간염 보균자만 해당 질병에 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甲국의 국민 중 10%가 B형 간염 보균자라고 하자. 최초 한 명의 감염자가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들 중 B형 간염 보균자가 아닌 사람들은 해당 질병에 감염될 것이므로, 2단계 감염자수(R_1)는 $10 - 0.1 \times 10 = 9$ 이다.

< 상 황 >

각 국가(A~E)에서 새로운 감염병이 발견되어 퍼지기 시작하였다. A~E국에서 발견된 감염병은 각각 다른 질병으로, 각 국 연구진들이 알아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	기초감염재생산지수(R_0)	면역비율(p)
A	15	0.6
B	5	0
C	12	0.5
D	16	0.125
E	8	0.25

- A, B
- A, C
- A, C, E
- B, C, D
- B, D, E